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14
2023/7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영길 | **감수** 목진용, 남정호 | **담당** 김소연 Email: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 · 해양법 연구실(051-797-4642)

Contents

국제법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2
ITLOS, 아프리카 법률관을 위한 지역워크샵 개최
ICC 국제해사국, 기니만 해적행위 재발에 대해 경고

국제사법재판소 ····· 6
국제사법재판소,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200해리 이원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

국제기구

국제해저기구 ····· 12
ISA, 심해저 광물 개발을 위한 개발규칙 합의에 실패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 ····· 16
CLCS, 동유럽 대표 위원의 사임으로 보궐 선거 필요

지역별 동향

아시아 ····· 18
중국 중국, 솔로몬 제도와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중국 중국·베트남, "통킹만 경계획정, 자원 공동개발 서둘러야"
중국 중국 해경, 순찰함 2척 파견해 북태평양 공해 순찰
대만 대만 '한광훈련'…중국 군함·전투기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
대만 대만, 2024년 국방비 사상 최대치 편성…동기비 7.5% 증가
일본 일본, 센카쿠 열도 주변 경비능력 강화
일본 방위성, 중국 강습상륙함이 오스미 해협 처음 통과 발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해 영해경계획정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판정 7주년, 필리핀과 관련국 입장 표명

북아메리카 ····· 38
미국 남태평양 지역에서 점차 고조되는 미-중 간 힘겨루기

오세아니아 ····· 42
호주 호주-파푸아뉴기니(PNG) 안보협정 체결 연기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계획 ····· 45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연구원 김 민

ITLOS, 아프리카 법률관을 위한 지역워크샵 개최

그림 1. ITLOS 지역워크샵 참석자



그림 출처: ITLOS

7월 2-7일,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아프리카 법률관(legal adviser)을 위한 ITLOS 지역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에는 앙골라, 보츠와나, 카메룬, 코모로,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에스와티니, 가봉, 케냐,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세이셸,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의 법률관이 참석하였다. ITLOS 지역워크샵에서는 해양법재판소의 역할, 재판소 회부 절차, 해양경계획정, 대륙붕, 해양환경, 어업, 항행 등의 해양 이슈와 같은 해양법의 절차적, 실질적 이슈를 모두 다룬다.

알버트 호프만 ITLOS 소장은 개회사에서 미래의 해양법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판소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고, 이번 워크샵 개최를 지원한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어서 국제 및 지역 교섭과 해양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회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수행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이번 회의에는 지역워크샵을 지원한 대한민국의 외교부도 참가하여 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해양법재판소 내 인턴십 프로그램, 지역 워크샵 등과 같은 재판소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출처 : [1] ITLOS, 2023년 7월 3일, "Press Release"

국제해양법재판소 ICC

연구원 김 민

ICC 국제해사국, 기니만 해적행위 재발에 대해 경고

그림 2. 해적 방어 장치가 장착된 선박



그림 출처: BIMCO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산하 국제해사국(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IMB)이 기니만에서 해적(Piracy) 및 해상무장강도(Armed Robbery at Sea)가 재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들의 조치를 촉구하였다. 2023년 1분기 해적행위가 대폭 소강 상태를 이르렀으나 2분기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IMB가 집계한 2023년 상반기 상선에 대한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사건은 65건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2년 같은 기간보다 58건 증가한 수치이다. 65건의 사건 중 57건은 해적 승선, 2건은 해적에 의한 납치, 2건은 선박 발포 사건이다.

상승세에 접어드는 해적 활동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선원의 안전이다. IMB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동안 36명의 승무원이 인질로 잡혔고, 14명이 납치, 2명이 부상, 1명이 폭행을 당하였다. 이 모든 납치 사건은 기니만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에 대한 해적 공격은 2분기에 가속화되었으며 가해자들은 주로 정박 중인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 공격에는 공격을 위한 납치 3건, 납치 2건이 포함된다. 납치는 또한 선박 장비의 절도와 화물의 절도도 동반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CC

이에 대해 마이클 하울렛 IMB 국장은 “국제사회가 기니만 해적 활동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항행 및 어업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IMB는 또한 싱가포르 해협에서 해상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주변국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투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싱가포르 해협의 해적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 선원과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그림 3. 싱가포르 해협 내 해적 의심 선박



그림 출처: Singapore Information Fusion Centre

출처 : [1] ICC Interanational Maritime Bureau, 2023년 7월,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Report – 1 January ~ 30 June 2023 [2] Maritime Executive, 2023년 7월 11일, IMB Warns of a Resurgence in Gulf of Guinea Piracy

국제사법재판소

전문연구원 김 지 혜

국제사법재판소,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200해리 이원의 해양경계 획정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

지난 2023년 7월 13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니카라과 v 콜롬비아 사건[1]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본 사건은 2013년 9월 16일 니카라과가 콜롬비아를 상대로 ICJ에 회부한 두 번째 해양경계획정 사건이다. 첫 번째 해양경계획정 사건[2]에서 니카라과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도 요청했으나 재판소는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니카라과의 예비정보만이 제출된 상황에서 콜롬비아와의 대륙붕 중첩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요청을 수락하지 않은바 있다. 따라서 2012년 판결 이후 니카라과는 2013년 6월 24일 CLCS에 카리브해 남서 부분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제출했으며, 같은 해 9월 16일 위 2012년 판결에서 미결로 남은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를 다시 ICJ에 회부했다.

2014년 CLCS가 니카라과가 제출한 대륙붕한계정보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CLCS의 최종 권고가 부재한 상황에서 ICJ가 경계획정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 니카라과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 청구가 2012년 판결에 따른 기판력에 방하는지 등이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 논란이 되었으나, 2016년 ICJ가 내린 선결적 항변에 관한 판결에서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본안 심리를 앞두고 2022년 10월 4일에는 본 사건의 구두 심리 형식에 대해 ICJ 역사상 처음으로 본안 심리를 두 개로 분리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본 사건에서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니카라과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대해 기술적 및 과학적 사안을 고려하기 이전에 법적 문제 에 대해 우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니카라과와 콜롬비아에게 다음과 같이 재판소가 구성한 두 개의 법적 질문에 한해서만 각국의 본안 진술 내용을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1) 국제관습법에 따라 일방국의 영해가 설정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가 넘어서는 대륙붕에 관한 권리가 타방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 해역으로까지 넘어설 수 있는가?

1)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Nicaragua v. Colombia)

2)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국제사법재판소

(2) 국제관습법상 영해의 폭이 설정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어서는 대륙붕 경계의 설정 기준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해양법협약 제76조 제2항에서 제6항까지는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는가?

위 두 개 질문에 대한 구두 심리는 2022년 12월과 2023년 6월 30일에 진행되었으며, 2023년 7월 13일 선고된 ICJ의 판결은 사건을 종료시키는 최종 판결이 아닌 위 두 질문에 대한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실제로 양 소송 당사국들은 니카라과의 나머지 청구사항에 대한 구두 심리가 진행할 기회를 아직 가지지 못했으며, 2022년 12월 진행된 구두 심리에서 니카라과는 재판소에게 니카라과의 나머지 청구사항에 대한 심리 및 판결을 진행하기 위한 기일을 정해달라는 요청을 특별히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J는 2023년 7월 13일 위 두 개의 질문에 대한 판결뿐만 아니라 나머지 니카라과의 청구사항에 대한 판결도 같이 내렸다.

결론적으로 ICJ는 2023년 7월 13일 판결문을 통해 국제관습법에 따라 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한 국가의 권원은 타방 국가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내의 수역으로 연장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재판소는 일방 국가가 대륙붕에 대한 연장을 가진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더라도 그에 대한 권원은 타방 국가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안으로 연장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대륙붕 연장 한계선을 결정하는 기준과는 상관없이 일방 국가의 연장된 대륙붕은 타방 국가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내에 있는 대륙붕과 중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기반으로 재판소는 “과학적 및 기술적 고려사항과는 상관없이 니카라과는 콜롬비아 본토 연안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안으로 대륙붕을 연장할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콜롬비아 본토 연안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내에서는 경계획정을 해야 할 중첩된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소는 산안드레스와 프로비덴시아 섬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세라닐라와 바호 누에보 섬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이번 ICJ 판결은 대륙붕에 대한 권원은 대륙붕의 자연연장 그리고/또는 지구 물리학적인 기준보다 거리가 더 중요한 기준이가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특히, 재판소의 결론은 200해리 내의 대륙붕에 대한 권원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권원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방 국가의 200해리 내의 대륙붕에 대한 권원은 타방 국가의 200해리 내의 대륙붕 권원과 중첩될 수 있지만,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권원과는 중첩될 수 없다. 재판소는 사실상 이번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

통해 그동안 해양법협약 제76조 제5항에 의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제한하는 두 가지 기준에 이어 세 번째 기준을 만들은 것이다.

이번 ICJ 판결문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재판소는 연안국들의 CLCS 제출문서에서 타방 연안국들의 200해리 한계까지의 정보만을 제출하는 국가관행에 대한 검토 내용을 포함한 콜롬비아의 변론서를 토대로 충분한 국가 관행과 법적 확신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이번 판결을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 알려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의 판결 내용과 모순된다. 북해 대륙붕 사건에 재판소는 국가 관행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 그 관행이 일반적이고 획일적이어야 하며, 더불어 이러한 관행을 요구하는 법적 규칙이 존재하고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재판소는 그 관행의 빈도나 심지어 행위의 습관적인 성격은 국제관습법을 성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소가 국가 관행의 근거로 삼은 CLCS 제출문서의 경우 이는 매우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요약본만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제출문서 자체가 대륙붕 외측한계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륙붕 한계선은 CLCS의 권고에 기반하여 설립된다. 또한, 많은 연안국들이 타방 국가들의 200해리 내에 있는 해역의 과학적 정보를 CLCS 제출문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여러 이유 중에서도 CLCS 의사규칙에 따라 제출된 문서의 관련국이 분쟁을 주장시 CLCS의 심사가 불가해지는 점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전략적인 결정에 따른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0해리 내에서 과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CLCS 제출문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들이 타방 국가의 200해리 수역 내의 정보를 CLCS 제출문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해서 인지(법적 확신) 또는 단순히 전략적 이유에서 선택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외에도 니카라과는 이전 사건에서도 나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경계를 획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앞서 2012년 판결 또는 2016년 판결에서 중첩되는 권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적 격성이 없다고 판시할 수 없었는지, 이번 ICJ의 판결이 회색지대의 존재와 법적 타당성에 주게 될 함의가 무엇인지, 연안국의 해양 경계를 정하는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단일 대륙붕' 개념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등 많은 의문들을 제기한다.

국제사법재판소

그림 4. 2012년 ICJ 판결을 통해 설정된 해양경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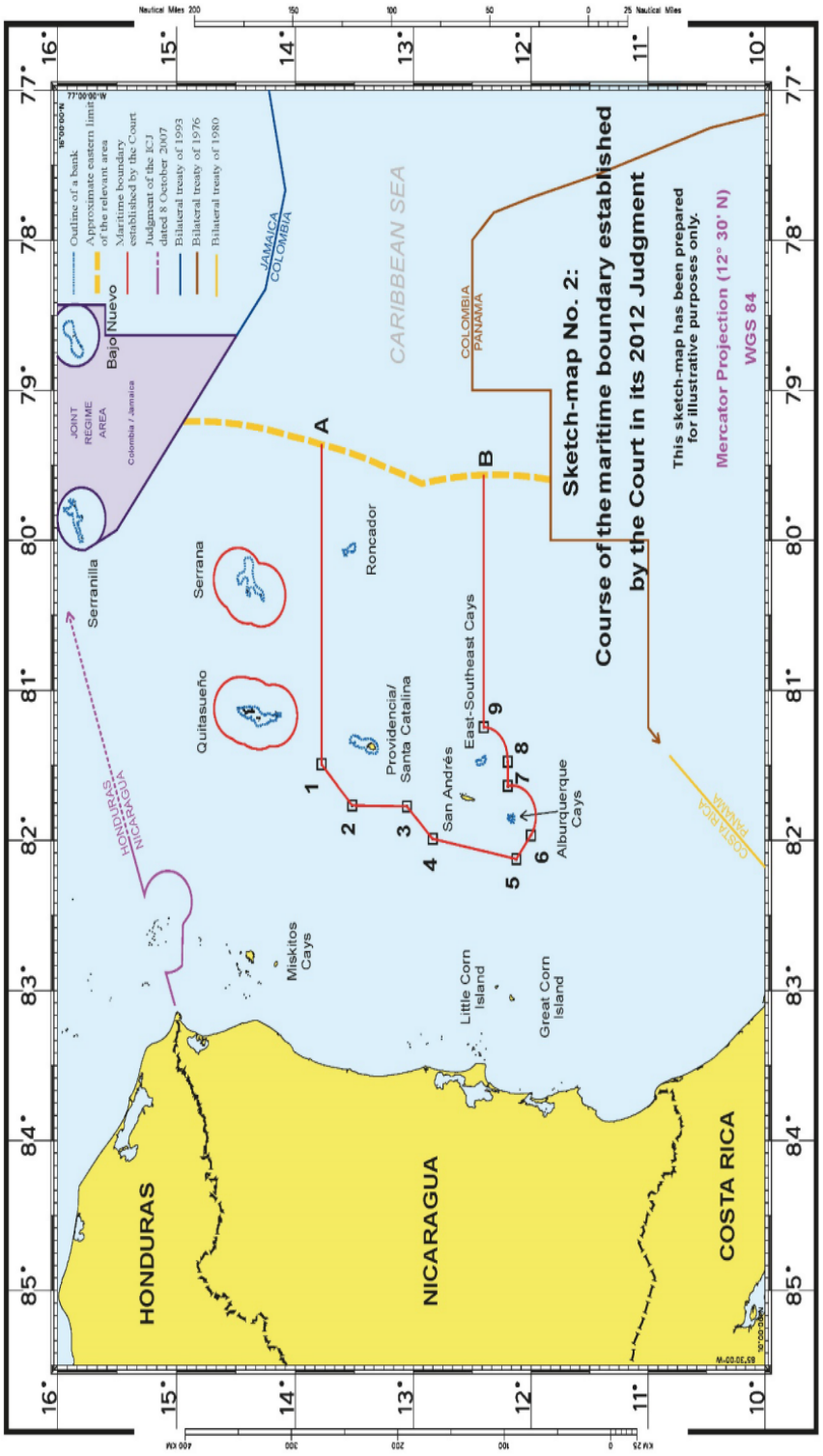


그림 출처: ICJ

국제사법재판소

그림 5. 니카라과가 제안한 최종 경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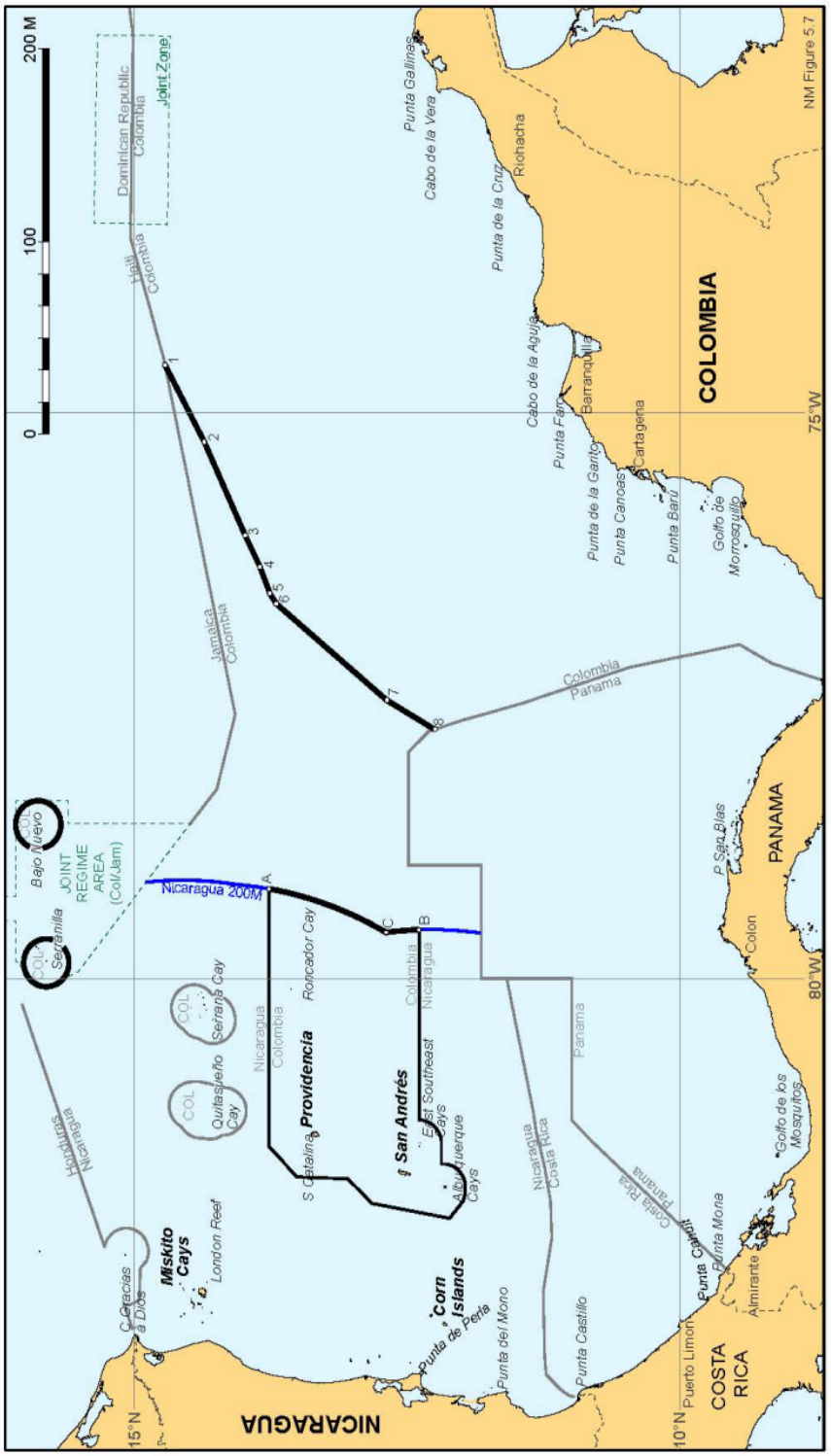


그림 출처: ICJ

국제사법재판소

출처 : [1] ICJ, 2023년 7월 13일, Judgement: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umbi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Nicaragua v. Columbia)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정세리포트, 2022년 11월, ICJ, 니카라과 v. 콜롬비아 사건 본안 분리 심리 결정 [3] EJIL: Talk!, 2023년 7월 21일, Preliminary reflections on the ICJ Judgement in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umbi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Nicaragua v. Columbia) of 13 July 2023

국제해저기구

전문연구원 민영훈

ISA, 심해저 광물 개발을 위한 개발규칙 합의에 실패

지난 7월 10일-21일 2주간 자메이카 킹스톤에서 개최된 ISA 이사회는 결국 심해 채굴에 대한 즉각적인 허가나 해저 광물 개발에 대한 개발규정 초안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ISA 이사회는 2025년 제30차 회기를 목표로 개발규정에 관한 협상과 연구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합의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광물에 관한 개발규정이 채택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림 6. ISA 이사회 제28차 회기 2부



그림 출처: ISA

사실, 금년 7월 ISA 이사회 제28차 회기에서는 나우루가 2021년에 제기한 이른바 '2년 규칙'으로 인해 개발규정이 채택되거나 또는 개발규정 채택과 관계없이 해저 광물 개발 사업계획을 잠정적으로 승인할 것에 대해 합의할 것이라 기대되었다. 2년 규칙은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협정의 부속서 제1조제15항b호에 따라 심해저 자원 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가 요청할 경우 ISA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저 개발에 필요한 규칙, 규정, 절차 등을 채택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나우루는 이러한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25일 심해자 자원 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사를 ISA에 표하였으며, ISA 사무국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2023년 7월 9일을 기한으로 ISA 이사회가 개발규정을 채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엔

국제해저기구

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협정 부속서 제1조제15항c호에 따라 ISA는 승인 계류중인 개발 사업계획을 잠정 규칙, 규정,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잠정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따라서 2023년 7월 21일에 종료되는 ISA 이사회는 2년 규칙이 완료되는 7월 9일 직후 개최되는 회의로 개발규정을 채택하거나 또는 개발 사업계획 잠정 승인을 위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ISA 이사회는 제28차 회기가 종료되는 7월 21일까지 개발규정을 채택하는 것뿐만아니라 사업계획 잠정 승인을 위한 규칙을 채택하는 것에도 특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실 개발규정이 금번 제28차 회기까지 채택되기 힘들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바이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개발규정의 환경규제, 개발이익분배, 규정 운영 등에 대한 국가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규칙이 채택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ISA 이사회는 해저 개발 사업계획을 잠정 승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잠정 승인을 위해 ISA 이사회는 잠정 규칙, 규정, 절차 등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ISA는 사업계획 잠정 승인을 위한 규칙, 규정, 절차 또한 이번 회기에 합의하지 못했으며, 이에 향후 해저 개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이에 대한 잠정 승인에 관한 규칙, 규정 절차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7. ISA 이사회 제28차 회의 전경



그림 출처: Mongabay

국제해저기구

사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프랑스 등 환경선진국과 환경운동가들이 원하는 결과이다.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이들 국가들은 현재 해저 광물 개발이 심해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고,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행된 이후 이를 근거로 해저 개발 활동에 관한 적절한 환경보호대책이 수립되어야 해저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해저 광물 개발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과학적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저 개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ISA 이사회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국가이원에서의 해저 개발 행위를 연기 또는 금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나우루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자원 개발을 지지하는 국가들 및 기업들은 현재의 ISA 결과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다. 해저 자원에는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필수 요소인 리튬을 비롯해 희토류, 코발트 등이 대량 묻혀 있다. 이에 자원 개발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해저 자원 개발을 통해 신산업 개발을 위한 필수 자원을 적절히 공급하여 자원 가격 및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다만, 자원 개발을 통해 초래될 수 있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을 활용하여 해저 환경 오염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림 8. 망간단괴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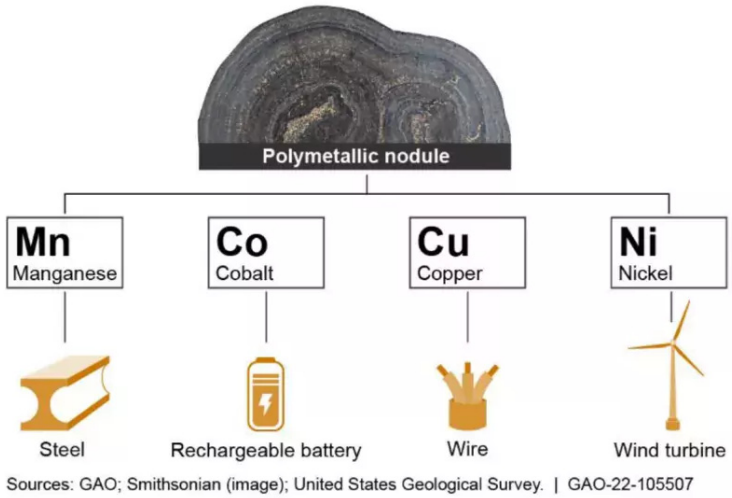


Figure 1. Cross-section of a polymetallic nodule, approximately 1 to 4 inches in diameter, showing the critical minerals that can be found within the nodule, and their applications.

그림 출처: GAO

국제해저기구

현재, 자원 개발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2년 규칙에 따라 사업계획 잠정 승인을 위한 요청을 ISA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ISA에 접수된 사업계획 승인은 없다고 ISA는 밝히고 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해저 개발에 대한 정치·사회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심해저 개발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영국을 제외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받는 기업들이다. 반면, 서유럽 다수 국가들을 비롯하여 많은 선진국들은 심해저 환경 보호와 해저 활동 개발 관리를 이유로 해저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해저 개발 기업의 경우 다수의 선진국의 저항을 예상하며 개발 활동 사업계획을 ISA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외신들은 해저 개발 기업들의 현재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만간 해저 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ISA에 요청할 수 있을 거라 언급한다. 예를 들어, 나우루 해양 자원 주식회사(NORI)를 후원하는 금속 회사(TMC)는 이전에 실적 부진으로 나스닥 주식 상장 폐지 가능성을 통보받은 적이 있다. 이에 이러한 회사들은 해저 개발 활동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 할 경우 근시일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국 외신들은 ISA 이사회의 해저 개발규정 채택이 지연될수록 재정이 어려운 회사들은 개발 사업계획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ISA 이사회는 개발규정 채택에 더 많은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출처 : [1] GAO(Karen Howard), 2021년 12월 16일, Deep-Sea Mining Could Help Meet Demand for Critical Minerals, But Also Comes with Serious Obstacles [2] ISA, 2023년 8월 7일, The 28th Session of the Interantional Seabed Authority [3] Mongabay(Elizabeth Claire Alberts), 2023년 7월 25일, Deep-sea mining rules delayed two more years; mining start remains unclear [4] Oilprice(Tsvetana Paraskova), 2023년 7월 25일, UN Fails To Reach Agreement On Deep Sea Mining regulation [5] The NCLOS blog, 2023년 6월 28일, Deep-Sea Minerals Exploitation: The 2-Year Rule Deadline is Running Out, What Happens Next? [6] 경향신문(이윤정), 2023년 7월 3일, 배터리 필수광물, 심해 채굴 시대 열린다…"해양생태계 파괴, 돌이킬 수 없을 것" 우려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전문연구원 김주형

CLCS, 동유럽 대표 위원의 사임으로 보궐 선거 필요

제32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SPLOS) 제6기 CLCS위원 선거(2022년 6월 15일 진행)에서 동유럽 국가 그룹으로 선출된 Mateusz Damrat 위원이 지난 2023년 6월 2일 사임했다. 예정된 임기는 2023년 6월 16일~2028년 6월 15일이나, 임기 시작 전 사임한 것이다.

따라서 동유럽 그룹 대표의 남은 임기를 수행할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필요하며, 아울러 3명으로 배정된 동유럽 그룹의 공석 1석에 대한 선거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제33차 SPLOS에서 5년 임기 시작 1년 전에 위원회 위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 21명의 위원 선거는 2027년 6월에 실시되며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28년 6월 16일에 시작된다.(SPLOS/33/12)

표 1. 현 CLCS 위원 명단

	성명	국적(추천국)	그룹
1	Carandang, Efren Perez	필리핀	아시아 (5)
2	Sivaramakrishnan, Rajan	인도	
3	Tang, Yong	중국	
4	Yamazaki, Toshitsugu	일본	
5	Adnan Rashid Nasser Al-Azri	오만	
6	Apaalse, Lawrence Asangongo	가나	아프리카 (6)
7	Loukili, Miloud	모로코	
8	Mahanjane, Estevão Stefane	모잠비크	
9	Moreira, Domingos de Carvalho Viana	앙골라	
10	Njuguna, Simon	케냐	
11	Randriamiarantsoa, Tolojanahary	마다가스카르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성명	국적(추천국)	그룹
12	Brekke, Harald	노르웨이	서유럽 및 기타 (3)
13	Dos Santos de Campos, Aldino Manuel	포르투갈	
14	Mosher, David Cole	캐나다	
15	Garcez Faria, Antonio Fernando	브라질	중남미(4)
16	Inniss, Helena	트리니다드 토바고	
17	Troisi, Ariel Hernán	아르헨티나	
18	Yáñez Carrizo, Gonzalo Alejandro	칠레	
19	[사퇴] Damrat, Mateusz	폴란드	동유럽(2)
20	Glumov, Ivan F.	러시아	

출처: CLCS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출처 : [1] CLCS, 2023년 8월 22일,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 Members of the Commission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중국, 솔로몬 제도와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중국이 태평양 도서국 솔로몬 제도와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솔로몬 제도 머내시 소가바레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은 7월 10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격상을 선포했다. 중국은 솔로몬 제도의 어업, 해양자원 보호·개발을 비롯해 농업과 농촌, 자연재해 대응 기반 시설 건설, 에너지 광산, 정보통신, 교육, 보건 등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실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솔로몬 제도는 1983년 대만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2019년 9월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단교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구하며, 자국의 수교국이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가바레 총리는 2019년 4월 취임 후 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한 인물이다. 태평양 도서국 14개 가운데 10개국이 현재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그림 9. 머내시 소가바레 총리와 시진핑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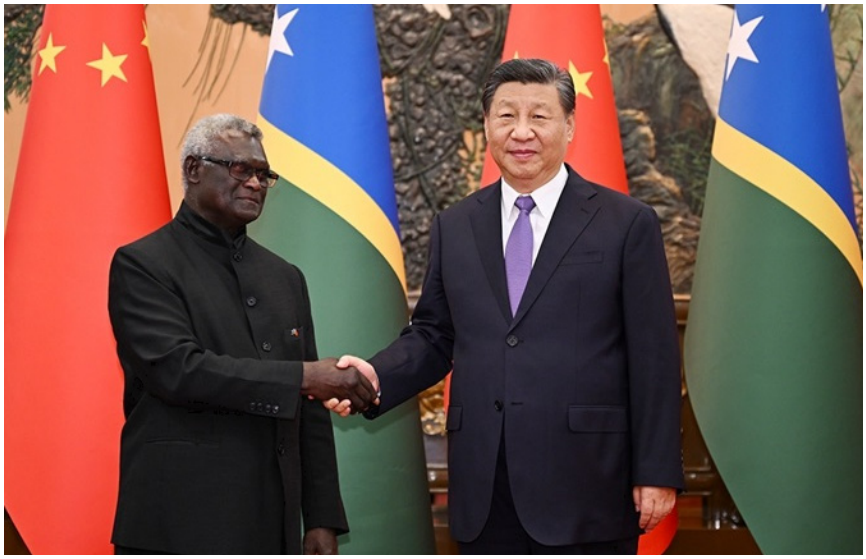


그림 출처: 人民网

미·중, 태평양 관문 두고 각축

한편, 중국과 솔로몬 제도는 이번 외교관계 격상 전인 2022년 6월에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중국의 군, 경찰, 무장 요원 등이 솔로몬

아시아

중국

제도에 파견될 수 있고 중국의 해군 함정이 솔로몬 제도에 기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호주 등 서방에서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군사력을 확대하고 솔로몬 제도 등 수교국을 교두보로 확보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솔로몬 제도는 호주 북동쪽으로부터의 거리가 약 2,000km에 불과하고 남태평양의 관문과 같은 위치에 있어 태펴양 도서국 가운데에서도 특히 전략적 가치가 높다. 또한 솔로몬 제도는 인구, GDP 규모 측면에서 볼 때 태평양 도서국 가운데 파푸아뉴기니, 피지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 중인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솔로몬 제도의 밀착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림 10. 솔로몬 제도 위치



그림 출처: BBC

솔로몬 제도 문제는 결국 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미·중 경쟁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들과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중국-태평양 도서국 운명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중국은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인 일대일로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미국도 솔로몬 제도 챙기기에 나섰다. 2022년 2월 솔로몬 제도 수도 호니아라(Honiara)에 29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설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솔로몬 제도에서 현지 정치인, 사업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 온 미국과 솔로몬 제도의 우호적 관계가 위험에 처하게 돼 대사관 개설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의회 제출 보고서에서 밝혔다.

아시아

중국

그림 출처: U.S. EMBASSY TO PAPUA NEW GUINEA, SOLOMON ISLANDS, AND VANUATU

그림 11. 주솔로몬 제도 미국 대사관 29년 만에 재개설



출처 : [1]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서남아태평양과, 2014년 11월, “태평양도서국 개황” [2] VOA, 2022년 2월 13일, “미국, 솔로몬제도에 29년 만에 대사관 개설” [3] BBC, 2022년 3월 25일, “Solomon Islands confirms China security draft, alarming Australia” [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2년 6월 3일, “Wang Yi on China-Solomon Islands b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5] U.S. Department of State, 2023년 2월 1일, “Opening of the U.S. Embassy in Honiara, Solomon Islands” [6] 中华人民共和国政府, 2023년 7월 10일, “中华人民共和国和所罗门群岛关于建立新时代相互尊重、共同发展的全面战略伙伴关系的联合声明（全文）” [7] 人民网, 2023년 7월 13일, “习主席提出“四个充分尊重”揭示中国外交之道”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 현욱

중국·베트남, “통킹만 경계획정, 자원 공동개발 서둘러야”

중국과 베트남은 7월 4일 중국 광저우에서 ‘제16차 중국·베트남 통킹만 해구 외해역 워킹그룹 협의회’와 ‘제13차 해상 공동개발 협의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재개한 대면 회의인 이날 행사에는 중국 외교부 변계 및 해양사무사(边界与海洋事务司) 양런훠(杨仁火) 부사장과 베트남 외교부 국가경계위원회 트린 득 하이(Trinh duc Hai) 부주임 등이 참석했다.

그림 12. 중국·베트남 간 통킹만 해양경계 및 공동어업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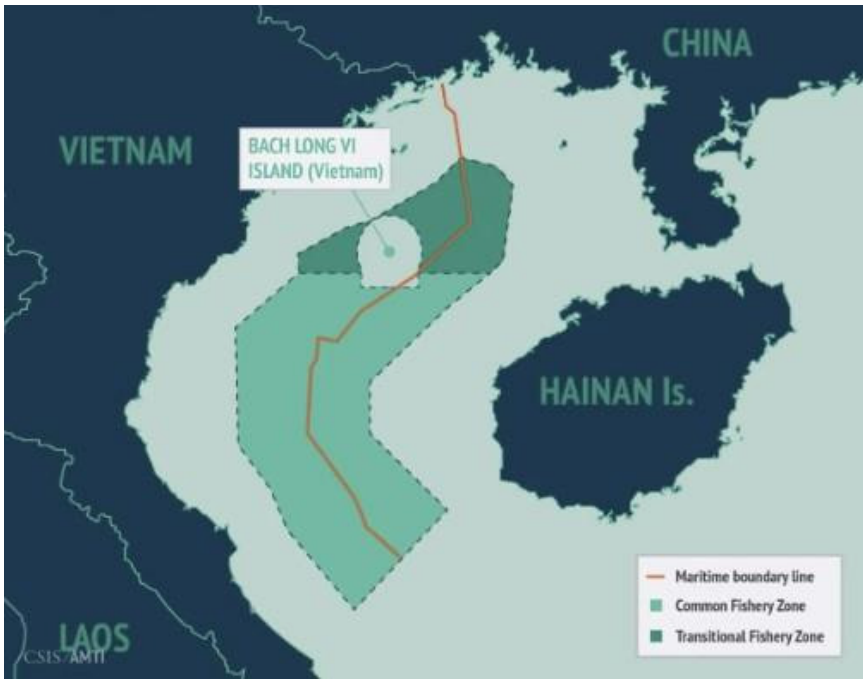


그림 출처: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SIS

회의에서 양측은 2011년에 서로 합의한 ‘해상 문제 해결에 관한 기본 원칙’을 이행하고 통킹만 해구 외해역 경계 획정과 남중국해 석유·가스 공동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기타 해양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통킹만 어업 협력 협정 논의와 비분쟁 해역에서의 석유가스 개발 협력 추진을 가속화하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로 합의했다.

아시아

중국

유엔해양법협약 회원국인 중국과 베트남은 양국 사이에 있는 반 폐쇄해, 통킹만(중국명 베이부완)을 두고 1993년부터 2000년까지 7차례의 정부간 협상, 3차례의 협상대표 회담, 18회의 공동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회의를 개최하여 2000년 12월 25일 '중국과 베트남 간 통킹만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획정에 관한 협정'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 통킹만 어업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중국이 주변국과 체결한 최초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으로, 2004년 6월 30일 발효되었다.

한편,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 북한,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8개국과 해상경계획정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출처 : [1] 최진모(2006), "중국-베트남간 통킹만 어업협정 및 해양경계협정 사례에 관한 소고," 해양정책연구 제21권 1호 [2]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SIS, "Gulf of Tonkin Maritime Boundary Agreement" [3]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Government News, 2023년 7월 4일, "Viet Nam, China talk maritime issues" [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0년 12월 25일, "中越北部湾划界协定情况介绍" [5]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南海问题, 2011년 10월 12일, "关于指导解决中国和越南海上问题基本原则协议" [6] CCTV, 2013년 2월 20일, "外交部：中国与8国有海上争议 与2国未划定陆界"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 현욱

중국 해경, 순찰함 2척 파견해 북태평양 공해 순찰

중국해경국은 북태평양 공해상의 어업과 관련한 법 집행, 순찰 차원에서 해안경비함인 취산(衢山)함과 하이먼(海门)함을 7월 28일 상하이항에서 파견했다. 중국은 '북태평양공해수산자원보존관리협약' 회원국으로서 책임있는 대국,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참여, 공해 어업 생산 질서 유지, 해양자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그림 13. 중국해경 취산함



그림 출처: 中华人民共和国 中央人民政府

'북태평양공해수산자원보존관리협약'은 협약 수역 내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이러한 자원이 서식하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2월 24일 채택, 2015년 7월 19일 발효되었다. 중국은 2014년 11월 28일에 이 협약을 비준하고 2015년 7월 19일 발효했다.

중국 해경국은 최근 어업 관련 국제기구의 제도 변화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공해상에서 어선 승선 및 검사 권한을 신청해 IU(불법, 미신고, 비규제)

아시아

중국

어업 단속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6월 북태평양 공해 어선 승선권과 조사권을 획득했다. 중국 해경은 2021년 2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해경법(中华人民共和国海警法)을 시행했으며,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2021년 7월 30일에 북태평양 공해에 취산함과 하이먼함을 파견한 바 있다. 당시 두 순찰함은 쓰시마해협, 쓰가루해협, 오스미해협을 통과했으며, 31일 동안 총 111척의 어선을 관찰하고 3척의 배에 승선해 검사했다. 또한 2022년에는 8월 31일에 창산(长山)함과 스청(石城)함을 파견해 해당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항해 일정은 45일에 달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해경법은 제8장 국제협력 제65조에서 "해경기관은 외국의 해상 법 집행기관 및 관련 국제기관과 다음 해상 법 집행에 관하여 국제협력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해상 연합 순찰, 검색, 연습, 훈련 활동을 포함했다.

출처 : [1] South China Morning Post, 2023년 7월 29일, “Chinese coastguard ships sent on fisheries patrol mission to the northern Pacific” [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北太平洋公海渔业资源养护和管理公约”, http://treaty.mfa.gov.cn/web/ detail1.jsp?objid=1531876112832 [3]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21년 7월 30일, “中国海警赴北太平洋公海开展渔业执法巡航” [4]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22년 9월 1일, “中国海警圆满完成2022年北太平洋公海渔业执法巡航任务” [5] 中国新闻网, 2023년 7월 28일, “中国海警舰艇编队起航赴北太平洋开展公海渔业执法巡航”

아시아

대만

전문연구원 정 현욱

대만 '한광훈련'…중국 군함·전투기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

대만은 7월 24일부터 5일간 제39회 한광(漢光)훈련을 시행했다. 한광훈련은 대만에서 시행되는 연중 최대 규모의 군사 연습으로, 중국의 침공을 가정해 방어와 격퇴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1984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원래 1952년 대만과 미국 간 '공동방위조약' 체결 이후 양국이 매년 연합훈련을 진행했으나 1979년 미·중 수교 시 위 조약이 폐지됨에 따라 대만이 1984년부터 단독으로 한광훈련이라는 이름의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14. 2023년 제39회 대만 한광훈련



그림 출처: 今周刊

최근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만의 한광훈련은 39년 역사 중 실전과 가장 유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를 곧바로 침공하는 경우를 가정한 이번 5일간의 군사연습 기간 동안 대규모의 대피 훈련인 완안(萬安)훈련도 진행되었다. 이 대피 훈련은 지난해의 경우 지방정부 3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지만, 올해는 22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대만은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

대만

주요 기반 시설의 안전 보호 훈련도 시행했다. 대만 군은 작년 2월부터 장기간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요 시설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자각하고 이 같은 훈련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역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한광훈련 직전인 21일 오전 6시부터 22일 6시 사이에 대만 주변 해역에 중국 군함 7척을 출동시키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공역에는 중국 군용기가 37회 출동해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 10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를 침입했다가 중국 쪽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 중에는 중국판 F-16이라고 불리는 J-10 전투기와 이보다 업그레이드된 J-16 전투기, 그리고 Y-8 대잠항공기, Z-9 대잠헬기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대만해협 중간선은 중국 푸젠성 동쪽과 대만 서쪽 사이에 있는 대만해협에서 영해와 영공을 나누는 중앙선으로 북위 27도·동경 122도 지점과 북위 23도·동경 118도 지점을 기점으로 연결한 약 205해리(380km)의 직선을 의미한다. 이 중간선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식 경계선은 아니지만 이 중간선이 그어진 1955년부터 1999년까지 40년 넘게 중국과 대만 양측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지 않고 양안 간 경계선으로 묵인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1999년 7월 이 중간선을 침입하기 시작했으며, 양안관계가 악화한 2016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침입이 상시화되고 있다.

출처 : [1] 今周刊, 2023년 7월 24일, “假想中共直取台北，漢光演習39年來最逼真最近實戰！桃機反空機降、台北港反登陸…5天重點必看” [2] VOA, 2023년 7월 24일, “台灣漢光演習前，解放軍連日出動幾十架戰機和多艘戰艦侵擾台灣周邊海空域” [3] 公視新聞網, 2023년 7월 24일, “萬安演習今起分4天舉行 3大注意事項一次看” [4] 凤凰卫视, 2023년 7월 26일, “39年来最接近实战的一次军演！揭祕台湾“汉光军演”的戏里戏外”

아시아

대만

전문연구원 정 현욱

대만, 2024년 국방비 사상 최대치 편성…동기비 7.5% 증가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024년 대만 국방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4,400억 대만달러(NT$, 한화 약 18조5,000억 원)로 편성됐다. 2023년에 비해 7.5% 증가한 것으로, 국방비 4,000억 NT$를 넘는 것은 2023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공중 전력 향상 특별 예산과 신형 전투기 특별 예산까지 더하면 총 5,342억 NT$에 달한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증액된 예산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도입, 무인기 및 방공 시스템 구매 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만 행정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 심사안을 7월 말 통과시켰다.

그림 15. 2017~2024년 대만 국방비 추이(억 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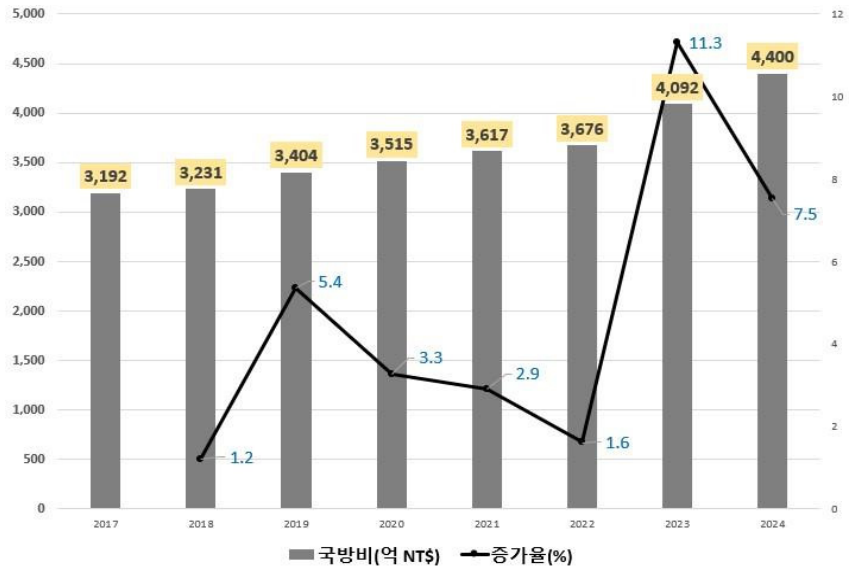


그림 출처: 三立新聞網

2023년 이후 국방비 연이어 4,000억 NT$ 초과

2016년 5월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2017년 국방비는 3,192억 NT$였는데 2024년 4,400억 NT$로 1,000억 NT$ 이상 늘어났다. 2024년까지 대만의 국방 예산은 연평균 4.7% 증가했다(2024년은 편성안). 이는 같은 기간 대만의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수치로 양안 및 미·중 긴장 상황과 차이잉원 정부의 대중국 강경 정책을 반영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6%를 기록했다.

아시아

대만

한편, 대만의 국방비가 GDP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대만이 무기 구매 확대 등을 통해 그 비중을 최소 3%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림 16. 2023년 7월 대만 한광훈련을 격려하는 차이잉원 총통



그림 출처: 中華民國總統府

출처 : [1] The Washington Post, 2022년 8월 25일, “Taiwan to boost defense spending to deter China’s military threat” [2] 上報, 2023년 5월 24일, “【內幕】2024年國防預算定案 潛艦後續艦預算國防部沒編一毛錢” [3] 三立新聞網, 2023년 7월 30일, “強化軍事實力！2024國防預算逼近4400億創新高” [4] 中華民國統計資訊網, https://www.stat.gov.tw/

아시아

일본

전문연구원 김주형

일본, 센카쿠 열도 주변 경비능력 강화

센카쿠 열도 주변의 경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헬리콥터 탑재형 대형 순시선인 아사나기호를 신규 배치했다. 선체 길이 약 140m, 총 톤수 약 6,000톤, 헬리콥터 2대를 탑재할 수 있는 규모이며, 야간에 선박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갖추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2022년 12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해상보안능력 강화에 관한 방침'에 따라 센카쿠제도 주변의 경비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순시선 신규 배치도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해경선의 활동이 증가하는 데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경비력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아사나기 호는 가고시마 해상보안부에 배치되어 센카쿠주변 해역 경비 및 구조·구난과 해상범죄 단속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2022년 말 중국 해경국 선박이 일본 접속수역에 진입한 일수는 334일로,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제도를 국유화한 이래 최다 일수를 기록했다.

출처 : [1] NHK, 2023년 7월 6일, 尖閣諸島周辺の警備能力強化 大型巡視船の引渡し式 下関 [2] NHK, 2022년 12월 29일, 尖閣 接続水域に中国海警局の船 ことしの航行日数が過去最多に

아시아

일본

전문연구원 김주형

방위성, 중국 강습상륙함이 오스미 해협 처음 통과 발표

6월 29일 방위성은 중국 해군의 강습상륙함이 가고시마현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강습상륙함과 구축함 각 1척이 오스미 해협을 통과했으며, 중국 해군 보급함 등 다른 2척은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앞바다의 일본 접속수역을 항행한 후 태평양 쪽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강습상륙함이 구사가키 군도 남쪽 약 40km의 접속수역을 항행하고 있을 때 헬리콥터 1대가 비행해 구축함에 착함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스미 해협, 무네타니 해협, 쓰가루 해협, 쓰시마 해협 서·동수도는 영해를 3해리 선포한 일본 영해법 상의 '특정해역'으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국제해협이다. 따라서 중국 해군 함대는 일본 측의 제약 없이 지나갈 수 있다.

강습상륙함은 헬리콥터나 고정익 수직이착륙 전투기 등의 항공기를 탑재해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항공모함에 버금가는 규모의 함정이다. 중국 강습상륙함은 중국 해군에서 2년 전에 처음 취역한 이후 지금까지 3척이 배치되었다.

중국 함정이 일본 주변 해역을 통과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중국 해군 강습상륙함이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출한 것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 함정의 일본 해역 통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3년 7월에는 미사일 구축함 등 5척이 쓰시마 해협을 통해 북상해 무네타니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에서 군사훈련 후 미야코 해협을 거쳐 중국 본토로 돌아갔다. 2014년에는 해군 구축함과 보급함 등 4척이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출한 뒤 무네타니 해협을 통해 동해로 진입했으며, 쓰시마해협을 통해 동해에서 동중국해 방향으로 진출입하며 일본 주변 해역을 일주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에는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 함정 10척이 홋카이도와 혼슈 아오모리현 사이의 쓰가루 해협을 통과해 오스미 해협을 지나 동중국해로 향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중국의 행동은 일본열도 주변으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맞서기 위해 태평양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그 해양전략의 일환으로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을 세웠다.

아시아

일본

이 전략에 따라 일본 열도에서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로 뻗어나가는 제1열도선과 일본 오가사와라 열도와 괌을 잇는 제2열도선을 설정하고 주변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오스미 해협을 통과한 함정들은 태평양에서 장기간 훈련할 가능성이 있어 방위성이 경계와 감시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림 17. 일본 5개 특정해역 위치



그림 출처: 中国新聞, 2009년 6월 22일, 核通過見込み５海峡で領海３カイリ「密約」で政府判断

출처 : [1] NHK, 2023년 7월 1일, 中国の強襲揚陸艦 大隅海峡を初めて通過 防衛省 [2] 読売新聞オンライン, 2021년 10월 24일, 中露の艦艇１０隻、大隅海峡も初めて同時通過…中国駆逐艦ヘリ発着で空自が緊急発進 [3] 産経新聞, 2016년 3월 12일, 日本列島を包囲する中国海軍艦隊…大手を振って海峡通過！列島を一周できる領海法の大問題 [4] 海上保安庁, 特定海域 [5] 中国新聞, 2009년 6월 22일, 核通過見込み５海峡で領海３カイリ「密約」で政府判断

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전문연구원 이 서 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해 영해경계획정

지난 2023년 6월 7일-8일,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말레이시아로 초청하였다. 양국은 8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상호 관심사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현안은 양국의 술라웨시(Sulawesi)해 영해경계획정에 관한 사안이었다. 술라웨시해의 암발라트(Ambalat)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인접한 위치에 있는 해전 유전으로서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곳이다.[3] 현재 양국 사이에서는 술라웨시해 석유와 가스에 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갈등의 역사

말레이시아는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대립하게 되었고, 1960년대부터는 경계획정 문제가 양국 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예컨대, 1969년부터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의 대륙붕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직선기선을 주장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군도기선을 주장하였다.[4]

1998년 인도네시아는 술라웨시해의 쉬파단(Sipadan)과 리기탄(Ligitan) 두 섬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말레이시아와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다투었다. ICJ는 1969년부터 분쟁 중인 쉬파단과 리기탄에 대한 소유권을 2002년에 말레이시아에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ICJ 판결로 인해 양 국 해군이 충돌할 뻔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일부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은 말레이시아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지난 6월 13일 말레이시아 총리는 인도네시아와의 해상 국경 분쟁에 관하여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 술라웨시해는 태평양 서남부 보르네오섬, 민다나오섬, 술라웨시섬에 둘러싸인 해역으로 면적은 28만㎢이다. 셀레베스해라고도 한다.

4) 국가들은 저수위표 경계선(low-water mark boundary) 좌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기선 협상을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린다. 해양구역 경계 획정시 기선 선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공동성명 내용

지난 6월 8일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서는 양국 정상이 서명에 참여한 조약을 밝혔다. 이 조약 중 해양경계에 관한 SOM 조약과 술라웨시해 조약에는 말라카(Malacca) 해협과 술라웨시해 일부의 영해 경계협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5] 이에 대해 양국 정상은 SOM 조약과 술라웨시해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이 조약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미해결 해양경계협상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이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공동성명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법 집행 기관의 어업인 처우에 관한 공통 지침[6]의 양해각서(MOU)의 효과적인 이행과 어민들의 안전 및 생계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 채널의 유지를 강조하였다. 양국의 술라웨시해 영해 경계획정에 관한 합의는 약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해양경계협상의 타결을 의미하였으며, 2024년 6월까지 육상경계 문제 역시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상은 양국 간 국경 분쟁을 매듭짓고, 유럽연합 삼림벌채 규제(European Union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의 도입을 통해 팜유 차별조치에 공동으로 맞서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유럽연합이 차별적 조치의 즉각적인 해결, 공정하고 공평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동성명은 말레이

5) 양국 정상이 서명에 참관한 조약은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국경 통과에 관한 협정(BCA)(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Malaysia and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Border Crossing (BCA) ▷말레이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국경 무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Malaysi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Border Trade (BTA) ▷투자 도모 협력에 관한 말레이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Malaysi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Cooperation in Investment Promotion) ▷말레이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국내 제품에 관한 이슬람식 인증 상호 승인에 관한 협력각서(MoC)(Memorandum of Cooperation (MoC) between the Government of Malaysi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Mutual Recognition of Halal Certification for Domestic Products) ▷말라카 해협 최남단에 있는 양국의 영해 경계에 관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의 조약(SOM 조약)(Treaty between Malaysi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Territorial Sea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Southernmost Part of the Straits of Melaka (SOM Treaty) ▷술라웨시해에 있는 양국의 영해 경계에 관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 조약(술레웨시해 조약)(Treaty between Malaysi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Territorial Sea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Sulawesi Sea (Sulawesi Sea Treaty)

6) The Common Guidelines Concerning Treatment of Fisherman by Maritime Law Enforcement Agencies of Malaysi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시아 내 모든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복지 및 생계 보호 개선, 미얀마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출처 : [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laysia, 8 June 2023, Joint Statement by the Honourable Prime Minister of Malaysia and His Excellency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he Indonesia [2] New Straits Times, 13 July 2023, Malaysia, Indonesia have good record on cooperating at sea [3] The Diplomat, 9 June 2023, Indonesia, Malaysia Sign Border Agreements, Pledge Joint Action on Palm Oil [4] AP, 8 June 2023, Malaysia, Indonesia end 18-year sea border disputes, vow to cooperate in defending palm oil industry

아시아
필리핀

전문연구원 이 서 희

남중국해 중재판정 7주년, 필리핀과 관련국 입장 표명

지난 2023년 7월 12일, 필리핀을 비롯한 영국, 중국, 일본은 남중국해 사건 판정 7주년을 맞아 자국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다음 날인 13일, 유럽연합이 일본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필리핀과 중국의 입장

2023년 7월 12일, 엔리케 마날로(Enrique Manalo) 필리핀 외교부 장관은 남중국해 중재판정 7주년을 맞아 이에 관한 필리핀의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 외교부 장관은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이제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 판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파트너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남중국해 사건 판정에는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공간의 합법적 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적용되는 명확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필리핀의 입장 표명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날 왕원빈(Wang Wenbi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왕원빈은 2016년 7월 12일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이미 명확히 밝혔음을 분명히 하였다. 중재재판소는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고 관할권을 행사함으로써 판정을 내렸다고 하면서,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일반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 사건 판정이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이 판정을 수락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판정 내용에 근거한 어떤 청구나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오랜 역사과정에서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법에 확고한 근거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불법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법 전문가와 학자들이 이 판정의 심각한 결함을 지적하였다고 하였다. 중국은 아세안과 함께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효과적 이행과 남중국해 행동강령(COC)에 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해양분쟁의 경우 관련국

아시아
필리핀

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접근법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관련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대화 및 협의를 통해 해양분쟁을 관리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영국의 입장

영국 대변인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양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서, 필리핀과 중국은 이 판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영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에 관한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해양법협약에 반하는 모든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은 남중국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입장

2023년 7월 12일,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HAYASHI Yoshimasa) 외무상은 남중국해 중재판정 7주년 기념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일본은 중재재판소 판정이 분쟁 당사자들에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이 사건의 당사자인 필리핀과 중국이 중재판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역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일본은 중재판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기본가치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은 지난 2023년 2월에 발표된 일본-필리핀 공동성명, 2023년 4월 G7 외교장관 공동성명(G7 Hiroshima Leaders' Communiqué), 2023년 5월 G7 히로시마 정상 공동성명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실을 상기하였다. 일본은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유지(status quo)를 변경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아세안 및 기타 관련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필리핀

유럽연합과 일본의 공동성명

2023년 7월 13일, 제29차 유럽연합-일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유럽 이사회 의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일본 총리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무력이나 강압으로 인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 지역안정과 국제규칙의 기반이 되는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긴장이 고조되는 현상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과 일본은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화, 강압, 협박에 관한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특히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할 의무와 유엔해양법협약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 또는 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존중해야 할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과 일본은 하나의 중국정책 등 대만에 대한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밝혔다.

출처 : [1] Erklärung, 13 July 2023, Gemeinsame Erklärung zum Gipfeltreffen EU-Japan [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12 July 2023, Seven years since the issuance of the Arbitral Tribunal's award as to the disputes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Statement by Foreign Minister HAYASHI Yoshimasa) [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2 July 2023,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Wang Wenbin'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July 12, 2023 [4] GOV.UK, 2 July 2023, UK statement on the South China Sea

북아메리카
미국

전문연구원 김소연

남태평양 지역에서 점차 고조되는 미-중 간 힘겨루기

오늘날 태평양 지역은 미중 전략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와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포하는 등 중국은 다소 공세적으로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미국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을 남태평양 지역의 여러 도서 국가들을 순방하게 함으로써 관련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남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모양새다.

남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중요성

남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비록 그 토지 면적은 매우 작은 편에 속하나 광활한 바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수산 및 해저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이들 국가는 유엔 총회 등 외교 무대에서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므로 이들 국가는 상당한 대외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가 지리적 및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의 남태평양 지원 노력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통가, 뉴질랜드와 호주를 순방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비전, 안보협력 강화, 기후 및 청정에너지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는 순방 일정 중에 통가를 찾아 통가 주재 미국 대사관 개소식에 참석한 후 시아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미 국무부장관이 통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남태평양 지역 도서국가들에게 중국의 '약탈적인 투자'가 야기할 위험성에 관한 경고와 함께 이를 비판하였다. 2006년 통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발한 이후 도시 재건을 위하여 일부 중국 자본을 조달하게 되면서 약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부채를 지게 되었는데, 이는 통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에 달하는 수준이다. 만약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중국은 해당 국가의 항구나 도로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중국이 상당한 규모의 차관까지 제공하며 남태평양 지역에 진출하려는 것은, 이들 국가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북아메리카

미국

이다. 특히 이 지역은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요충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중국이 군사기지 설치를 점차 확대하는 경우 미국의 군사 안보 위협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와 경제적 강압 조치 등을 언급하며 역내 중국의 문제적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은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통가의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며 태평양 섬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그림 18.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의 통가 방문



그림 출처: REUTERS

최근 미국과 남태평양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자유연합협정(a Compact of Free Association, COFA)은 당초 1980년대에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역량 강화와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체결된 바 있다. 이는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3개국과 체결한 것인데, 이들 3개국에는 경제 원조와 군사 안보적 지원을 제공하고, 미군 주둔 등을 요구할 권리를 담은 협정이다. 이 협정의 효력은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와는 각각 2023년까지, 팔라우와는 2024년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은 미크로네시아, 팔라우와는 각각 20년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마셜제도와는 갱신을 위한 조건을 올해 말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3개국에 대한 COFA 협정의 갱신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다면 미국은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20년 간 총 71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하게 된다.

북아메리카

미국

한편 조니 에른스트 미국 아이오와 주 상원의원 등은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설립 및 지원, COFA 협정 국가들과의 긴급 인도주의적 대응 및 법 집행·해상보안활동 강화, 미국 국가안보기관과 COFA 대표기관과의 통합 등을 내용으로 하여 기존의 COFA 협정 내용을 확대하는 CONVENE(Ernst's Connecting Oceania's Nations with Vanguard Exercises and National Empowerment) 법안을 새롭게 발의한 바 있다. 이로써 미국의 의회 및 정부 모두가 남태평양 지역 도서국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공세적인 영향력 확대

중국은 일종의 경제적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대한 관여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즉 중국은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원조 및 투자를 아끼지 않는 반면 이들의 대중국 의존도는 점차 높이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1970년대부터 중국이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100여개 이상의 원조 사업 및 현물 지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직접 투자는 2013년에는 9억 달러 규모이던 것이 2018년에는 45억 달러 규모에 달하면서 무려 400% 가량 증가한 바 있다.

美, 뉴질랜드에 AUKUS 참여 권유…뉴질랜드의 깊어지는 고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은 이번 뉴질랜드 순방에서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협의체인 AUKUS에 뉴질랜드가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미국과 뉴질랜드는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협력해왔다고 설명하면서, 뉴질랜드의 AUKUS 참여는 AUKUS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AUKUS 확장에 반대하며 미국은 '아시아판 NATO'를 만드려는 것이 아니냐며 이러한 안보협의체는 역내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하며 비판하였다. 한편 중국은 뉴질랜드 전체 수출의 약 1/3를 차지하는 최대 무역 상대국 중 하나로,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에 뉴질랜드는 비핵정책과 대중관계 등을 고려하여 AUKUS 가입은 잠시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북아메리카

미국

그림 19.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과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



그림 출처: REUTERS

출처 : [1] Reuters, 2023년 6월 27일, “Blinken says door open for New Zealand to engage on AUKUS” [2] U.S. Department of State, 2023년 7월 26일, “Secretary Antony J. Blinken and Tongan Prime Minister Hu’akavameiliku at a Joint Press Availability” [3] VOA, 2023년 7월 26일, “Blinken Says Door Open for New Zealand ‘to Engage’ in AUKUS Pact [4] Reuters, 2023년 8월 5일, ”US lawmakers back closer coordination with Pacific islands to counter China“ [5] Joni Ernst, 2023년 8월 7일, ”Ernst Works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Pacific Island Nations to Counter China’s Malign Influence“

오세아니아

호주

전문연구원 민 영 훈

호주-파푸아뉴기니(PNG) 안보협정 체결 연기

지난 6월 체결 예정이었던 파푸아뉴기니(PNG)와 호주와의 안보협정이 7월 현재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호주와 PNG는 지난 1월 안보협정을 위한 협상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4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한 다음 6월에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PNG는 호주와의 안보 협정에 앞서 지난 5월 미국과 안보협정 및 해양안보 합의에 서명하였는데, 미국과의 안보협정 체결 당시 이러한 안보협정이 PNG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속에 PNG내에서 대규모 학생시위가 발생하였다. PNG가 호주와의 안보협정 체결을 무기한 연기한 것 또한 이러한 국내적인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제임스 마라페 PNG 총리 안보협정 서명



그림 출처: VOA

미국-PNG간 안보 협력

PNG는 지난 5월 22일 자국 수도 포트 모레스비(Port Moresby)에서 국방협력과 해양감시를 강화하는 미국과의 안보 협정 및 해양안보 합의에 서명하고, 이를 통해 PNG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PNG 정부는 협정 및 합의 서명과 관련하여 현재 PNG에게는 적이 없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향후 국경 분쟁이 불가피한 만큼 국방력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러한 합의를 하는 것이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러한 안보 협력의 일환으로 PNG 방위군을 위한 보호장비 등을 제공하기 위해 4천500만 달러의 자금

오세아니아

호주

을 제공할 것이라 발효하였고 이러한 자금에는 경제 협력 강화 활동 또한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 협력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PNG의 많은 국민들은 미국과의 협력이 잠재적으로 PNG의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PNG의 안보 협정이 미군에게 PNG의 항구와 공항에 접근을 허용하는 것인데 반해, 관련 내용이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의 안보협력 합의시 PNG 내부에서는 대규모 학생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호주-PNG간 안보 협정

PNG 총리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는 지난 6월초 호주에게 주권 우려를 이유로 협정 초안의 일부 문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PNG 현지 언론은 보도하였다. 마라페 총리는 수정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자국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문구가 합의될 경우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마라페 총리는 이러한 문제가 PNG의 주권 문제를 보존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호주는 이러한 PNG의 입장에 대해 PNG가 미국과 안보적 의미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호주는 미국과 PNG 모두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의

호주는 이미 PNG 방위에 대해 협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협정은 이러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호주는 PNG 롬브룸(Lombrum) 해군 기지에 의료 시설 건설을 지원하였으며, 통신 센터를 개선하는데 협력하였다. 사실 롬브룸 해군 기지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포함된 6개의 시설 중 하나이며, 호주 전문가들은 이 해군기지가 경비정을 유지·보수하는 중심 기지인 동시에 전략 관측 기지로서 역할한다고 보고 있다. 호주는 PNG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활동을 근간으로 향후 양국간 안보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을 포함한 3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협력이 주권 침해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니케이 등 외신은 호주와 PNG가 협정을 체결할 경우 협정문의 내용을 대중에게 발표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협상 과정 중 협정 내용에 대한 청문, 자문 등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미국과 PNG의 안보 협정 및 해양안보 합의 서명시 PNG 학생 시위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협정문 및 합의문이 대중에게 적절히 알려지지

오세아니아

호주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PNG 마라페 총리가 자국 주권의 문제의 해소를 위해 협정 문안의 수정을 호주 정부에 요구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안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다. 또한 협정을 통해 PNG 안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협력의 대상이 되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결국 PNG 정부가 국민들의 더 나은 지지와 함께 호주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혹은 국민 참여, 또는 정보공개 절차 등과 같은 투명성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1] ABC, 2023년 6월 1일, PNG delays bilateral security pact with Australia over sovereignty concerns [2] NikkeiAsia, 2023년 7월 28일, Australia-Papua New Guinea Security pact delayed on sovereignty debate [3] VOA, 2023년 5월 22일, 미국-파푸아뉴기니 안보협정 체결

3개월 내 행사계획

2023 로즈 아카데미(2023 Rhodes Academy of Oceans Law and Policy)

7월 2일(월) ~ 21일(금) / 그리스 로즈섬

- **주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에게해 해양법해사연구소, 아이슬란드 해양법연구소, 네덜란드 해양법연구소, 싱가포르대 국제법센터
- **협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미국 뉴햄프셔대 해양과학기술대학, 튀르키예 앙카라대 해양해사연구센터
- **주요 내용** 로즈해양법아카데미(Rhodes Academy of Oceans Law and Policy)는 해양법, 해양정책 및 해양과학 등을 주제로 하는 아카데미로,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아카데미임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8월 23일(수)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최/주관/후원** 해양수산부/한국해양재단, 국제해양법학회/한국해양진흥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 **주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과 개발사업계획 신청 관련 분쟁
- **주요 내용** (대회 공고 및 참가자 모집) 2023.5.18.(목) ~ 7.7.(금) 18시까지
  (변론서 접수 마감) 2023.7.21.(금) 18시까지
  (본선 진출팀 발표) 2023.8.11.(금) 예정
  (대회 및 시상식 개최) 2023.8.23.(수)

2023 제46회 해양법정책컨퍼런스(Conference on Oceans Law & Policy)

9월 20일(수) ~ 22일(금) / 튀르키예 이스탄불

- **주최** 미 해군대학 국제법센터, 튀르키예 앙카라대학교 해양해사법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세계해사대학, 일본국제문제연구소, 호주 해양자원안보연구센터, 인도 구자랏해양대학교, 세계해사기구 국제해사법연구소
- **주요 내용** 해양법정책컨퍼런스(COLP)는 국제해양법 분야의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학술회의로서, 올해 제46회를 맞이하는 컨퍼런스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운(Safe, Secure and Sustainable Shipping)'을 주제로 개최됨